

지정학: 2026년 그린란드 - 사건의 재구성

- 트럼프의 그린란드 편입 명분은 1) 북극 방위, 2) 서반구 영향력, 3) 중-러 견제, 4) 자원 확보 등. NATO와의 합의로 1), 3), 4)를 얻어 냈음
- 합의가 아니더라도 채권금리 급등이나 미 의회/법원 견제로 무력 옵션, 관세 카드 사용하기 어려웠을 것. 앞으로 관세는 문제해결의 옵션이 되지 못할 가능성
- 긴장 완화일 뿐 사태 종결 아님. 예를 들어 EU는 여전히 무역 합의 추진 보류 중

경제분석

Economist 이승훈
seunghoon.lee@meritz.co.kr

RA 박민서
mspark@meritz.co.kr

지정학은 본래 필자의 영역이 아니다. 여기에 정통한 분들이 정말 많다. 하지만 최근 들어 경제와 시장에 정치의 영향이 커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학계에 계신 분들의 도움을 받아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오늘 자료는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집착을 보이는 이유와 2026년 그린란드 긴장 고조-완화의 과정을 연계하는 접근을 취한다.

트럼프는 그린란드를 미국의 영토로 편입해야 하는 이유로 1) 북극 방위에 대한 관여 강화, 2) 서반구에 대한 미국 영향권 확대, 3) 중국-러시아 영향력 확대 배제, 4) 광물 자원 확보 등 4가지를 들고 있다. 그리고 특히 올 들어 미국이 베네수엘라 공습을 단행한 직후부터 그린란드를 손에 넣겠다는 야욕을 감추지 않고 있다. 무력 옵션을 거론하고, 영토주권 침해를 우려하여 군사훈련을 행한 덴마크 등 NATO 회원국 일부에게는 관세 위협을 일삼았다. 유럽도 수세적으로만 임하지 않으면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1월 21일을 기점으로 극적인 반전이 나타난다. 트럼프가 무력 옵션 카드를 배제하는 한편, 2월 1일부터 부과할 것이라 예고한 관세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이는 트럼프가 NATO와의 협상을 통해 1) 그린란드에 자국 지대공 미사일 요격 장치를 설치하고, 2) 광물 자원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면서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이다. 3) NATO는 중-러 영향력 확대 가능성도 배제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1월 20일 미국 국채금리 급등이 트럼프 행동에 제약을 가했고, 의회나 법원에 의해 무력 침범이나 관세가 무력화될 위험마저 존재했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은 안도했다.

몇 가지 시사점이 있다. 첫째, 관세 부과 위협이 재현되면 채권 자경단과 미국 내 견제가 다시 작동할 수 있기에 이 옵션이 다시 사용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다. 둘째, 긴장이 완화된 것일 뿐 사건 종결은 아니기에 계속 사안을 주시해야 한다. 트럼프는 여전히 그린란드를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EU 무역합의 의회 추진은 유보된 상태이다. 덴마크와 스웨덴 연기금의 미 국채 매도도 예정되어 있다.

1. 그린란드 이슈 개관: 간단한 역사와 트럼프의 집착 이유에 대해

그린란드를 점유(occupy)하고자 하는 미국 의사표시의 역사는 186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알래스카를 구매한 이후 덴마크로부터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 영토를 사는 것을 검토한 바 있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덴마크를 점령하자 미국은 그린란드를 방어했고, 냉전 시대에는 소련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미군 기지 설치를 공식화했다(1951년).

소련이 무너진 이후 전략적 위치로서 그린란드에 대한 관심이 줄었으나,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로부터 그린란드를 사겠다는 제안을 하면서 이슈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그리고 올 들어 다시 그린란드 영토 편입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다. 트럼프가 이토록 그린란드에 집착하는 이유로는 크게 4가지가 제기된다.

① 그린란드가 북대서양과 북극 방위의 전초기지이기 때문이다. 미국/유럽 미사일이 지나는 경로이자, 중국/러시아가 발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의 조기경보 작동 위치이기 때문이다. 그린란드 내의 미국 기지(Pituffik Space Base)가 수행하는 역할이기도 하다. 최근에 와서는 지구 온난화가 진행될수록 빙하가 녹아 선박의 북극 항로(航路) 확보가 가능하다는 이점까지 제기되고 있다.

② 서반구(Western Hemisphere)를 미국의 영향권(sphere of influence)으로 가져가기 위한 일환이다. 트럼프는 먼로 독트린(1823년, 서반구를 유럽 식민지가 잠식하는 것을 반대하며 유럽의 서반구 확장을 미국에 대한 적대적 행위로 규정)에 기반한 세계관을 지닌 사람이다. 그 관점에서 1)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주장), 2) 파나마 운하 운영권 회수(O), 3) 베네수엘라 공습 및 마두로 축출(O), 4) 그린란드 미국 영토 편입(주장) 관련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다¹.

③ 중국과 러시아가 그린란드에 대한 영향을 확대하길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리적으로는 러시아에 인접해 있다. 그리고 중국의 영향은 아직 크지 않지만 중국 스스로 “북극에 가까운 국가(near-Arctic state)임을 천명하고 있다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 특히, 일대일로처럼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거나 광물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런 우려를 덜어도 된다는 것이다.

④ 미국이 확보하고자 하는 광물자원 보고이기도 하다. 그린란드에는 희토류, 텅스텐, 니켈, 철광석, 구리, 아연 등 미국의 지질조사국이 선정한 핵심광물(원자재)이 다수 매장되어 있다².

¹ 그러나 여기에서도 균열이 나오기 시작. EU 와 MERCOSUR(Southern Common Market: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볼리비아)가 1월 17일 수 년간 끌어온 무역협정을 타결(링크).

캐나다는 중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한편, 일부 중국 전기차 관세 인하와 에너지 등 협력 확대 천명(링크)

² 노우호/황현식, "Energy Renaissance 5", Industry Insight, 메리츠증권(2026. 1.21), pp. 13, 33

2. 2026년 그린란드 사태의 전개

올 들어 그린란드 점유 야욕이 본격화된 것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하고 마두로를 축출한 직후의 일이다. 당시 백악관 정책비서관 Stephen Miller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소유할 권리가 있다고 언급했고(1월 6일), 트럼프 대통령도 군사 옵션(hard way)까지 거론(1월 10일)하며 “어떤 방식으로든 그린란드를 가지게 될 것이고, 임대도 아니며 단기적으로만 취득한다는 이야기도 아니다” 라 발언하였다.

덴마크는 이러한 미국의 발언을 자국령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간주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EU NATO 회원국들과 합동훈련을 시작했다(1월 15일). 미국은 당시 국민 덴마크를 비롯하여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낸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총 8개국에 대한 관세 위협을 하기에 이른다(1월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그린란드를 얻게 될 때까지 관세를 부과할 것이고, 2월 1일부터 10%, 6월 1일부터는 25%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트럼프 SNS 계정인 Social Truth에 게재된 내용이며, 공식적인 행정명령이나 선언문(proclamation)의 형태는 아니었다.

유럽연합의 경우, 그린란드 관련 분쟁이 격화되자 1) 작년 7월 미국과 합의한 무역협정의 EU의회 승인(ratification) 절차를 중단시켰다. 여기에, 2) 트럼프 행정부가 8개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경우 930억 유로 상당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매길 것이라 맞받아쳤다. 3) 프랑스와 스웨덴을 중심으로 바주카포(bazooka)라 불리는 통상위협 대응조치(ACI; Anti-Coercion Instrument)³의 발효까지 논의되었다.

미국-EU, 미국-덴마크 간 긴장은 고조되어 왔으며, 당분간 교착 상태가 이어질 확률이 점차 커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1월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1) 그린란드를 무력으로 점령할 의사가 없으며, 2) 미국과 NATO가 그린란드와 관련한 협의의 토대를 마련(formed a framework of a future deal with respect to Greenland)했다고 다보스 포럼에서 밝히며, 2월 1일부터 부과 예정이던 관세를 전격 철회했다. 영토 분쟁이 통상 마찰로 확산되며 연쇄적인 보복관세 및 ACI 도입 가능성이 우려되었던 환경에서 극적인 전환을 이룬 것이다.

³ 제3국이 EU 또는 회원국의 합법적 주권행사를 방해하여, 통상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적용하거나 적용을 위협하는 소위 “경제적 위협(예: 차별적 수입관세)”을 가할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 2023년 입안된 이후 한 번도 사용된 적 없음. 조치는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음.

1단계에서는 제3국의 위협을 중단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지속될 경우 2단계로 대응 조치를 “법률로 채택”하여, 제3국과의 교역이나 EU 시장접근 등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법률로 채택되려면 EU회원국 동의를 있어야 하나, 인구의 65%에 준하는 최소 15개국의 동의를 요하며 만장일치 불필요. 시급할 경우 EU 집행위원회가 3개월 간 조치를 취한 뒤에 사후적 추인을 받는 방법도 있음 (원문: Regulation (EU) 2023/2675 - [링크](#))

3. 극적인 전환의 배경

긴장 고조에서 극적인 전환을 유발한 요인들로는 크게 다음 세 가지를 지목할 수 있다. 첫 번째 이유가 긴장 완화를 앞당긴 요인이며,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유만으로 트럼프가 관세 위협에서 물러날 명분은 충분했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이 전부는 아니지만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을 다 밝힐 수는 없지만, NATO와의 회담에서 광물자원에 대한 권리(rights on minerals)와 골든돔(Golden dome; 이스라엘 아이언돔과 같은 지대공 미사일 요격시스템)의 그린란드 배치가 논의되었다고 했다. 별도의 NATO 사무총장(Mark Rutte)과 대변인 논평에서는 1) NATO 동맹국의 조속한 북극 안보 강화 노력(NATO allies step up Arctic security), 2) 그린란드에 대한 중국/러시아 영향 확대 역제를 목표로 덴마크-그린란드-미국 협상 지속 등이 언급되었다⁴.

이는 1절에서 열거한 트럼프의 집착 이유와 대체로 부합한다. 골든돔 배치와 NATO의 북극 안보 강화 노력은, 군사적 요충지인 그린란드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다(①). NATO 대변인의 중국/러시아 영향 확대(③), 광물자원 확보(④)도 그린란드를 노리는 트럼프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

둘째, 유럽 8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 예고 이후의 금융시장 반응이다. 트럼프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 및 영토 취득 의지는 미국 자체에 대한 신뢰 악화로 투영되면서, 1월 20일에 작년 해방의 날처럼 금융시장 트리플 약세(미 증시 하락, 미 국채 금리 급등, 달러 약세)가 나타났다.

주지하다시피 트럼프의 아킬레스건은 국채 금리 상승이다. 따라서 20일과 같은 반응이 수 일간 지속되었다면 문제가 커졌을 것이다. 덴마크 연기금의 국채 보유 전량 매각(1억 달러) 스웨덴 연기금 펀드 Alecta의 미 국채 비중 축소와 더불어, 유사시 유럽 NATO 회원국들의 미 국채 매도 공조(국채금리 급등 유도) 가능성까지 제기되어 왔다.

미국 외교 싱크탱크인 CFR의 Rebecca Patterson은 “미국 국채가 그린란드에 대한 최선의 방위 수단”임을 주장했고, 레이 달리오는 미국 신뢰 악화가 “자본 전쟁(capital wars)”으로 변질 수 있음을 우려하는 상황⁵에서 트럼프의 후퇴(TACO: Trump Always Chickens Out)는 어찌 보면 예견되었던 선택이었다.

⁴ Reuters (Jan 22), “Trump backs down on Greenland tariffs, says deal framework reached”, “Pact with Trump calls for allies to step up fast on Arctic security”

⁵ FT (Jan 20), “Treasuries could be Europe’s best defence for Greenland”, Rebecca Patterson (Senior Fellow, Council of Foreign Relations)

CNBC (Jan 20), “Ray Dalio warns that ‘capital wars’ could follow Trump’s actions, with countries dumping U.S. assets”

셋째, 관세 혹은 무력사용 옵션이 법원이나 의회에 의해 무력화될 위험이다. 의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8개국 대상 관세 무효화(링크),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그린란드 혹은 NATO 회원국에 대한 무력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고려 중인 상황이었다(1월 20일자 FT: “Republicans begin to push back against Donald Trump’s pursuit of Greenland”).

무력 옵션이 제일 먼저 철회된 것에는 물론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도 한 몫 했겠지만, 실제 행사되었을 경우 NATO의 종말을 재촉하는 수순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NATO 회원국인 덴마크의 영토를 침범한 것이기에 EU 스스로 유럽연합 조약(TEU) 42(7)에 의한 상호방위 조항(Mutual Defence Clause)을 발효시킬 수 있는 요건에 부합한다.

관세의 경우 민주당의 무효화 노력도 있었겠지만, 예고한 관세가 현재 대법원이 심리 중인 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이다. 미국의 그린란드 편입에 주요국이 반대하는 것을 국가비상사태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부분 위헌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부분의 관세만큼은 장기간 존립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4. 소결론과 시사점

미국과 유럽간 긴장이 깊어질수록 미 국채와 달러화에 부정적인 영향이 커졌을 것이나, 무력 옵션/관세 옵션의 조속한 철회에 힘입어 금융시장은 안도했다. 관세의 경우, 그 옵션이 제기될수록 채권 자경단이나 미국 입법/사법부의 견제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추후 이 카드가 다시 사용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다.

트럼프는 2026년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우리가 직접 나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그린란드를 방어하려면 임대가 아닌 소유의 형태여야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덴마크와 EU입장에서는 영토주권 침해 이슈가 잔존해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관세 철회에도 미국-EU 무역협정이 같은 날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고 유보(suspend)된 것이다. 한 고비는 넘겼으나 대서양 사이의 긴장이 소멸된 것은 아니기에 진행상황을 계속 주시해야 하겠다.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